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작년 6월 대통령이 길러문항을 없애라고 지시한 뒤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 경향을 예측해온 학생들에게 길러문항의 빈자리를 채울 유형이 무엇인지 새로 가늠해서 대비하기에 몇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이런 혼란을 막으려고 '고등교육법'에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적용 학년도 4년 전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 출제형식 등을, 2년 6개월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1년 10개월 전에는 각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옮겨줄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의 기본방향은 2021년 2월, 기본사항은 2022년 8월,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확정 공표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공표되어 있고 법령 위반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학정원이 갑작스레 변동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의 20~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1학년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제대로 지켜라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구하고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20여 년 전 도입했지만 실패한 학부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실패한 전철에 대한 대안은 없다. 분과학문의 격벽을 허물어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세대를 양성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취지를 실현하기 전에 교육과 학문이 먼저 붕괴된다면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장관의 계획대로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된다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으로 선택이 집중될 것이다.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는 콘나볼 강의실에서 교육의 붕괴를 겪게 되고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학과는 텅 빈 강의실에서 학문의 소멸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작년 말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의료 공백화, 고령화 대응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응급실 뱅뱅이를 겪고 있는 국민들은 환영이었다. 그러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의대 교육이 단절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사 집단 설득을 위한 노력도,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중단 사태에 대한 대비도, 폭증할 의대생으로 과부하가 걸릴 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없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고집으로 극심한 갈등만 유발하는 이유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 자본이 대학 소멸 시대에 큰 손해 없이 투자금을 쥘 수 있게 해준 바로 다음 학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무전공 입학

정책이 등장한 사실이 예상되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떨어지던 대통령 지지율이 의대 증원 논란 와중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현상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는 반발에 밀린 정부의 후퇴 전략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점에 있다.

무전공 제도의 입학 성적은 그 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중 입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과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대학에서는 무전공 입학 정원만큼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게 될 것이다. 모든 학과의 입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의대 커트라인으로부터 2000등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수험생들은 올해 입시의 목표를 의대로 설정하고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갈등했을 터이다. 작년 입시 결과 그 정도의 성취를 얻은 학생 중에는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재수를 결심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규모는 일류대학 한두 개의 입학 규모에 필적할 것이다. 이들 변수가 모든 대학의 입학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항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올해 무전공 입학 제도 도입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 규모도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책임을 각 대학에 떠맡기고 수험생을 불투명한 자율 속에 버려둔 것이다. 9월이면 수시 입시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정원이 유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입전형 안정성이라는 '고등교육법'의 법률 정신이 배반된 것이다.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정부라면 후퇴 전략 속에서도 길을 찾고 명확한 정원을 제시해야 옳지 않은가.

2040칼럼



조선익 위민연구원 이사·공인노무사

노사상생의 가치로 2019년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서에 '누적생산 35만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라는 약속을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상생협약서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조직, 교섭, 파업권을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GGM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완성차 업계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탁제공과 복지자금 출원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1월에 GGM 근로자들 5명이 제1노조를 조직한후 현재 조합원 수는 100명을 넘어 섰다.

노조가 출범한 GGM과 상생형 일자리

제1노조는 조만간 총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1노조에 이어 조직된 제2노조는 이미 지난 23일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GGM은 현실 노사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광주시는 '노조 결성과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만 표명하고 있고 상생협약의 이행이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여부, 향후 노사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현재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 광주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선두 주자인 GGM의 집단적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전국의 상생형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GGM의 현상은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처음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적 일자리의 탄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별적 노사관계이든 집단적 노사관계이든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

하는 상황에서는 노사 모두 성실근로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만 이후 조직의 경영 성과와 운영 방법의 변화, 노사의 입장 차이 등에 따라서 상황 변화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GGM의 상생협약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협약이 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현실 노사관계에 대해 광주시와 GGM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부다. GGM의 상생협약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예정하는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노동 3권이 현실화된 조직에서 상생협약과 노동 3권의 방향성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었다. 진지하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험 미숙과 행정의 오류로 노사 갈등의 확대 생산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GGM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임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노동 3권이 현실화된 GGM의 노사관계를 생산적인 과정과 결과로 광주시와 GGM 노사가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GGM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의 행정 능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고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얼마 전, 지역에서 꾸준히 탈핵활동을 해오던 국순군님이 타계하였다. 탈핵 운동에 열심이었던 고인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오랜 회원이었고 녹색당 탈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고인의 영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 많은 주의를 받았다.

고인은 환경운동과 탈핵운동에 쉼달라며 전 재산을 광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기 때문이다. 종종 독지가들이 대학교나 병원, 연구시설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환경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인에 대한 명복과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다.

항문안 소식이 뜸했던 고인은 지난 7월에 당산계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진단을 받았으며 재산 기부 의사를 밝혔었다. 오랜만의 전화에 반가움보다 필자는 당혹감이 앞섰다. 전화 너머의 고인의 담담한 목소리에 제대로 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지도 못한 채 조만간 만나 뵙기로 하고 전화를 마무리하였다.

얼마 후 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집과 집에 딸린 입아

탈핵 활동가의 마지막 염원

를 사후에 광주환경운동연합에 기증하기로 변호사 공증을 하였다. 고인은 독신으로 살아오셨고 형제분들은 계셨지만 고인의 뜻을 존중하시러 기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생전에 과학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논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리고 사회학, 철학 등 인문 영역까지 두루 섭렵하며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데 책임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을 매개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았다.

고인은 타계 직전까지 핵발전소 문제를 크게 염려하였다. 특히 한빛 1, 2호의 수명 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로 채 2년이 남지 않았다. 한수원은 한빛1,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빛 1,2호기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사건 사고도 많았다. 그래서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 많은 반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구 처분이 어려운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운영시 발생하는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빛1, 2호기 수명 연장 과정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방사선

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검토가 빠져 있다. 또한 '원자력 이용 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운영중 발생가능한 사고에 다수호기 사고를 포함하게 되어 있으나 다수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빛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 중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수명 연장 관련 내용을 공람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 선물을 주며 서명을 중용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도 고인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지난해 8월이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섯차례에 걸쳐 수 만톤을 바다에 방류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의 안전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하다고 면죄부를 줬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혀 과학기술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황당함과 무책임함을 보였다.

지난 26일은 체르노빌 핵사고 38주년이었다. 예년 같으면 국순군님은 현장에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을 외쳤을 것이다. 국순군님은 선천적으로 불뉘는 몸을 이끌고 언제나 현장에 함께 했었다. 올해는 국순군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社說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5·18 헌법 수록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지만 최대 현안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염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들을 수록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세운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의거가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적 사건들이다. 4·19 의거는 헌법에 수록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권위를 가지게 됐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18에 대한 애국과 편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이 법원 판결과 정부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

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왜곡과 편별이 끊이지 않는데 헌법 수록을 통해 5·18에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왜곡 편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통일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뒤 취임 후 국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마당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있어야 한다. 법야권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도 동의하는 상황이라 헌법 전문 수록 실현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역민들은 이 문제 해결을 호남을 대하는 정부와 여의도의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 당선자들, 지역발전 초심 잃지 않도록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꾸렸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옛고려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을 발표했다. 민형배(광산을) 의원을 대표, 정준호(북구갑) 당선자를 간사로 뽑았고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양부남(서구을)·전진숙(북구을)·박근택(광산갑) 당선자 등이 멤버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포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전략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기존 국회의원 간의 느슨한 연대를 넘어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해 기대를 품게 한다.

총선 때 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당선자 모임이 구성됐지만 대부분 한, 두 차례 형식적 모임을 갖는데 그쳐 보여주기식 모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당선자들은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실질적인 실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소속당 거수기로 전략하거나 특권에 취해 유권자를 배신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선행들을 숭하게 봐 왔다. 무엇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 전 마음에 새겼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상기하길 바란다. 광주 지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실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무등구)

"...똥바는 가는 길 따라 비원과 소망의 기도 소리가 차례로 그의 몸속에 흘러가고 있었다. 우람차고 튼실한 그의 몸 자체가 장문의 절절한 기도문이자 거대한 기도의 탑이 되어가고 있었다." 상상해보라. 어머니나 지어미가 아들 또는 남편의 몸에 문신새기는 모습을... 그들은 '날이 새기 무섭게' 전정터로 끌려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지 여말지 알 수 없다. 몸에 입묵(入墨)을 하며 '찌르는 사람'과 '찢리는 사람' 모두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꺾 놓렸을 것이다.

부병자자(赴兵刺字)

윤홍길(82) 작가가 최근 완결한 장편소설 '문신' (전 5권·문학동네)에서 순금이 남편 신준복의 몸에 글자 '봄'을 새기는 대목은 비장하다. '봄'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용영장을 받고 떠났던 춘복은 광복을 맞고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작가는 소설의 모티브인 '부병자자'(赴兵刺字) 풍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대의 소망이지만, 만일 전사할 경우 가족들이 문신을 알아보고 시신을 수습해 고향 선산에 묻어주시길 바라는 회원(希

願)이 담긴, 민족 특유의 귀소본능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셈이다." 소설 '문신'은 작가가 30여년의 시간을 들인 필생의 역작이다. 일제 말기 세상불경에 어두운 반도 남쪽 공벽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장대한 서사는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이다. 천석꾼 최명배와 순금·부용·귀용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려 애쓴다.

얼마 전 전북 완주군에 자리한 작가의 창작 공간을 찾아가 인타부를 했다. 작가는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안 보고 작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쓴 작품"이라고 말했다. 1968년 등단한 작가는 '장미'(1973년)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년), '완장'(1983년) 등을 발표하며 한국문학의 새로운 장(章)을 열었다. 작가는 "퐁자가 남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의 칼과도 같은 것이라면 해학은 남의 쿡구멍을 간질이는 깃털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다. 작가와 함께 문학의 바다를 향해해 보기를 권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자복
편집총괄국장 최영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대부분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